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4년 2월 4주차 (2014.2.21. ~ 2.27)

요약(Summary)

1. 박근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 보건의료 등 규제 혁파...원격의료 활성화 주장(2/25)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기준 완화(2/25)
2. 총파업 전 회원 투표를 53.82% 넘어(2/26)
3. 3월부터 의료관광객 전용 '메디텔' 설립 허용(2/27)

○ 기타뉴스

- 與 '국민건강특위'는 의료영리화특위?(2/24)
- 상급종합병원 병상 늘리기 경쟁 '제동'(2/27)
- 원격의료법 국회 제출, 내달 10일 이후 예상(2/26)
- 복지부도 원격의료 입법 반대..국회 문건서 확인(2/26)
-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 강원도에서 현실화되나?(2/21)
- 심박센서 탑재 '갤럭시S5', 의료기기 논란(2/21)
- 직영 전환 군산의료원...경영활성화 '의문' (2/27)
- 서부산권 대형병원 '의료관광 벨트' 구축 추진(2/27)
- 藥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2015년 도입(2/27)
- 지난해 건강보험진료비 51조...전년대비 5.2% ↑ (2/25)
- 日 도시바 '의료사업' 본격 진출 선언(2/26)
- 일부 의학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중지해야"(2/26)
- 의사·치과·한의협 등 해킹 '1700만명 정보' 털려(2/26)
- 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유죄 확정(2/27)

1. 박근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 보건의료 등 규제 혁파...원격의료 활성화 주장(2/25)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원격의료 활성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경쟁원리 도입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 표명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위한 법개정 등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환경을 더욱 왜곡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¹⁾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기준 완화(2/25)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단서가 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합리화'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하는 방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규제가 지금은 총 병상수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1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책이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에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설립을 원하는 투자자가 없어 아직 한 곳도 설립돼 있지 않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싼얼병원이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또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 비율도 현재 5%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어 10% 확대가 당장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²⁾

2. 총파업 전 회원 투표율 53.82% 넘어(2/26)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전회원 투표율이 26일 오전 10시 기준 53.82%를 기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 6만 9923명의 회원 가운데 3만 7630명의 회원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충청남도 의사회로 71.76%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도 의사회가 62.3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투표 마감일인 오는 28일 자정까지 투표율은 60%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총파업 투표가 과반수를 넘긴 가운데 찬성표가 50%가 넘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3월 10일 총파업에 본격 들어가게 된다.³⁾

3. 3월부터 의료관광객 전용 '메디텔' 설립 허용(2/27)

의료민영화 정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의료관광호텔 '메디텔(meditel)'이 오는 3월부터 공식 허용된다. 법제처는 27일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를 통해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3월 1일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연간 환자수가 1천명(서울지역은 3천명)을 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거나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관광호텔업을 할 수 있다.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실을 20실 이상 취사시설과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춰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를 넘어서는 안된다.⁴⁾

1. 與 ‘국민건강특위’는 의료영리화특위?(2/24)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둘러싼 의료영리화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명칭과 달리 국민건강특위에 참여하는 민간 자문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허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특위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특위를 출범시켰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 산하에는 건강보험발전분과와 의료서비스발전분과를 두고 있다.

특위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에는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는 여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의과대학 교수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정부 산하 연구소 전문가, 의료기기업계 관계자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 구성을 보면 ▲이제호 성균관대 의대 명예교수 ▲박명희 한국미래소비자포럼 상임대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김석화 한국유헬스협회 부회장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원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정기택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조우성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김홍진 인성정보 u-Health사업부 이사 ▲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유태규 보건산업진흥원 R&D 운영위원 등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자문위원 중 상당수가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주장해온 인물들이란 점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의료시장주의자'라 평가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성균관대 의대 이제호 명예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를이지만 원격의료와 헬스케어, IT융합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하다. 이 명예교수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원격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고, 의료 IT전문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인물이다.

한국유헬스협회 김석화 부회장은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로, 서울대병원이 설립한 교육컨텐츠 전문 벤처기업인 버추얼애플의 대표를 맡은 적도 있다. 김 교수는 앞서부터 원격진료 등을 활용한 u헬스케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고, 서울대병원에서 추진한 원격의료 기반의 의료기관-재택 연계 u헬스 서비스 개발 연구를 담당하기도 했다.

서울대의대 김주한 교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미국 MIT에서 의료정보학(Biomedical Informatics) 공학석사를 마친 융합연구자이다. 김 교수도 각종 토론회에서 원격진료의 긍정적인 역할과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서울대병원의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경희대 경영학부 정기택 교수는 '의료영리화의 전도사'로 평가받는 인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영리병원 도입, 원격의료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

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공모에 정 교수가 지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국민건강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역시 정기택 교수만큼 의료시장주의자로 통한다. 이기효 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각종 정책토론회와 연구 발표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 필요성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1년 6월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그가 임명되자 공단 노조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역할을 강조해온 의료시장주의자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의 임명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양대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등 대표적인 '의료시장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위원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적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모에서 낙점설이 제기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대형병원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원격의료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 산하 기관이다.

자문위원으로 원격의료 허용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관련업체 종사자가 참여하는 것도 문제다. 국민건강특위 자문위원 중에는 인성정보 u-Health사업부 김홍진 이사가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가정용 원격의료기기를 개발한 업체로 증권가에서는 원격의료 정책 추진의 수혜주로 꼽힌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자문위원 구성을 보면 국민건강특위원 이름과 달리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정책 추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⁵⁾

2. 상급종합병원 병상 늘리기 경쟁 '제동'(2/27)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수 늘리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 병상을 늘릴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은 또한 감기처럼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경증·만성질환의 외래진료 비율을 17%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 2차 의료기관인 병원과 종합병원에 이은 3차 의

료기관으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자를 진료하도록 돼있다.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43곳이 지정되며 병원보다 10%p 많은 30%의 보험수가 가산율을 적용 받는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제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의 의료 이용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 증상을 억제하고 경증환자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에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병상 수를 늘릴수록 의료이용 실적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특히 병상 과잉지역의 증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도록 바뀐다. 단순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을 16% 이하로, 외래 환자도 경증이나 만성질환 등 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 비율을 17%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평가 항목을 현행 408개에서 537개로 확대해 기준을 강화했다.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해 7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⁶⁾

3. 원격의료법 국회 제출, 내달 10일 이후 예상(2/26)

의료계의 총파업 돌입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원격진료법안의 국회 제출이 오는 3월 10일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가 실무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다. 26일 오전 현재 법제처로부터 공식 통보는 없었지만 조만간 심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매주 금요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일단 의료계가 총파업 돌입 기간으로 결정한 오는 3월 10일 이후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총파업에 대한 의료계 찬성표가 50%를 넘겨 파업에 실제 돌입하면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나 국회 제출을 다시 연기하며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반대로 복지부가 강경하게 법안 국회 제출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복지부 업무보고에 이어 25일 취임 1주년 담화문 발표에서도 원격진료를 강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의료법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지연시킨 것은 대한의사협회 요청이 있었고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등을 두루 감안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오는 3월 10일 이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여부와 일정 등 복지부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⁷⁾

4. 복지부도 원격의료 입법 반대..국회 문건서 확인(2/26)

보건복지부가 의사과업 사태의 도화선이 된 원격의료에 대해 애초에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이라며 입법을 반대했던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가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2013년 6월)를 보면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확인된다. 이 문건은 지난해 6월 2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제출된 것으로 상임위 의원들이 현황에 대해 문의한 내용을 복지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원격의료 제도와 관련한 부처의 입장을 묻자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기술 등 산업적 관점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원격의료의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원격진료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제 등에 취약한 상황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압박을 해왔지만 이때까지만해도 복지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IT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금년에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문정림 의원 >	보건의료정책과(건강정보TF)
3. 원격의료 제도 관련 복지부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새정부 출범 이후 다른 부처와 협의사항, 복지부 입장 - 주요 시범사업 현황 등	
○ 원격의료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 기술 등 산업적 관점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u>사회적 신뢰확보</u> 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격의료의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원격진료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제 등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복지부는 현행 제도내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IT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u>시범사업을 금년에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u> 입니다	

정부는 2008년 5월부터 서산, 보령, 강릉, 영양 지역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간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를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을 충분히 한 뒤에 제도화, 즉 입법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현재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先)시범사업과 같은 입장이다.

이처럼 지난해 6월 말까지만 해도 원격의료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복지부는 불과 몇 달도 안된 10월에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깜짝 입법예고한다.

경제부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펼쳤던 주무부처의 입장이 순식간에 뒤집힌 것은 물론 법 개정을 검토하는 시간도 짧았음을 알 수 있다.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짧은 기간에 입법을 추진했다는 것이 문건으로 재확인되면서 타부처의 압력이나 윗선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상당수 복지부 직원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위험성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에 법 개정을 추후에 추진하자며 당시 진영 전 장관에게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 제출되는 서면 답변서는 부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애초에 원격의료 입법을 반대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불과 몇 달 만에 복지부 입장이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윗선의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 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요구는 산업계에서 계속 있어왔던 것이다"며 "(입장 변화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 토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법이 추진된 것이다"고 해명했다.⁸⁾

의료 산업

1.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 강원도에서 현실화되나?(2/21)

강원도가 '경영 성과'를 근거로 공공 병원인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에 대한 매각·축소·이전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몰아붙인 이후 우려됐던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강원도에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이날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의료원 발전 방안 연구 용역' 2차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정책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강원도의 의뢰를 받아 도내 공공 병원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강릉의료원은 대학병원에 매각하거나 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축소", 원주의료원은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을 각각 내놴다.

먼저 원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원주시 지역은 의료 공급 및 경쟁 과잉 지역으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 진료 및 경영 성과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전·재배치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는 "지역 내 경쟁 과잉 상태이고, 낮은 의료 수익과 높은 의료 원가, 적자 지속에 따른 미지급금 증가(체불 임금 41억 원 등)" 등을 지적하며 "도립 노인 전문 병원과 통합하여 요양 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대학이 강릉의료원을 인수해 대학부속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강릉의료원을 매각하면 진주의료원 폐업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체불 임금 문제가 불거지고 일부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보고서는 강릉의료원 매각의 효과로 "지역 내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 효과 등 경제 유발 효과"를 꼽았다.

그밖에 경영난에 처한 속초의료원에는 "건강검진센터 및 장례식장 증축을 통한 부가 수익 창출"을 주문하기도 했다.⁹⁾

2. 심박센서 탑재 '갤럭시S5', 의료기기 논란(2/21)

심박동을 쫓 수 있는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5'와 LG전자의 '심박동 이어폰'이 의료기기에 해당돼 국내 판매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헬스케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를 잇따라 내놓았다 생각지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6일 "갤럭시S5에 심박센서가 들어 있어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LG전자 라이프밴드 터치에 연동해 사용하는 심박동 이어폰도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날 최신폰 스마트폰 갤럭시S5를 선보이며 "스마트폰 최초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심박센서를 탑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검지를 스마트폰 뒤 카메라 아래 센서에 대면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알려준다. 이 센서는 스마트 손목시계 '기어 핏'에도 들어 있다. LG전자도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전시회(CES)에서 심박동 이어폰을 공개했다. 이는 귀에 흐르는 혈류량을 통해 심박수를 측정한다.

삼성전자는 제품 개발 때부터 식약처와 구두로 논의를 했고, 이달 초 의료기기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공식 문서를 보냈다.

‘의료기기법’ 제2조는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등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2등급 의료기기인 '내장 기능 검사용 기기' 중 '심박수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갤럭시S5는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만든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지침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 등의 장치를 이용해 스마트폰 자체를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의료용 앱에 해당돼 의료기기 허가 대상이 된다. 스마트폰의 광원(플래시)을 이용해 혈류량이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가 의료기기로 판단할 경우 안전성, 정확성 등 좀 더 엄격한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최종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당초 갤럭시S5를 4월11일 국내를 포함한

세계 150개국에 동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LG전자 심박동 이어폰도 아직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헬스케어 기능이 들어가는 스마트 기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도 혈압,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앱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헬스케어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될 경우 자칫 판매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만간 식약처가 판단한 내용을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식약처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제품 출시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¹⁰⁾

3. 직영 전환 군산의료원...경영활성화 '의문' (2/27)

직영 전환 후 원장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이 새 원장 공모 등으로 쇄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원광학원에서 위탁 운영해 오던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위탁계약이 종료됐으나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위탁공모에 응하는 기관이 없어 도 직영체제로 본격 전환됐다. 이는 도 측이 공모 당시 누적적자 해소 등 책임경영을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군산의료원이 530억원의 누적적자와 42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등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다. 직영체제 전환 후 도는 유택수 보건의료과장을 초대원장으로 파견했다. 이후 지난달 실시된 1차 신입원장 공모가 무산돼 현재까지 원장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의료원은 경영활성화를 위해 응급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안과 전문의 각 1명씩 4명을 공모를 통해 이달 말까지 확보키로 했다. 또 의사들의 진료시간을 주 2.5일에서 5일 이상으로 개선한다. 연봉계약제를 실시, 진료에 소홀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의사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을 통한 의료질의 향상을 위해 올해만 11억원을 투자하는 등 오는 2016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의료장비보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군산의료원은 재공모를 통해 신입원장 선정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실시한 1차 공모에서 응모자가 없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은 상태다. 누적 적자와 부채를 안고 의료원을 경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도에서도 신입원장 선임에서도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원장 공모가 무산된 원인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입원장 공모서류가운데 자기소개서에는 지원동기와 함께 지방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방안에 대한 견해 등을 적도록 돼있다.

한편,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말까지 15년 동안 원광학원에 위탁운영 됐다. 총 406병상의 규모로 현재 417명이 근무하고 있고 진료인원은 지난해의 경우 45만5000여명에 달했다.¹¹⁾

4. 서부산권 대형병원 '의료관광 벨트' 구축 추진(2/27)

부산대와 동아대병원 등 서부산권 대형 병원들이 '의료관광 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서부산권 대형 병원 5곳을 중심으로 '서부산 의료관광 클러스터'(West Busan Medical tour Cluster)를 구축, 다음 달 7일 출범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등 대학병원 2곳과 부산위생병원, 강동병원 등 병원 4곳은 최근 클러스터 조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부산대병원도 클러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병원은 병원별 특화진료를 중심으로 환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대병원은 혈액암, 동아대병원은 심뇌혈관, 고신대병원은 대장암, 강동병원은 척추 등 정형외과, 부산위생병원은 하지정맥류 등 일반외과 등으로 특화시켰다.

이들 병원은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앞으로 정부에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건의하고 러시아 등 주요 방문국·방문도시와 연결하는 원격진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인천공항 등에 환자 유치 사무소를 설치해 공동 운영할 방침이다.¹²⁾

약계 뉴스

1. 藥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2015년 도입(2/2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의약품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를 도입한다. 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역시 개선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국제협약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을 위해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면서 오는 4월 28일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고 했다. 이후 관련 심사를 거쳐 법령 개정 후 1년 뒤인 내년 중순 경 해당 규칙이 시행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의약품 품목허가 완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약가 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신약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품목허가 전이라도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결과를 심평원장과 제약사에 통지해 약가 평가가 신속히 이뤄지게 된다.

식약처는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무균제제가 아닌 생약제제의 밸리데이션과 시판 후 안전성 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희귀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 신청 시 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시상황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

만, 앞으로는 품목허가 시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바뀐다.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도 신설됐는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해 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별도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역시 신설될 계획이다.¹³⁾

기타 뉴스

1. 지난해 건강보험진료비 51조...전년대비 5.2% ↑ (2/25)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7426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발표한 '2013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0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고 1인당 의료기관이용일수는 19일로 나타났다.

입원진료비는 전년대비 7.8% 증가한 17조7279억원이었으며 외래진료비는 5.9% 증가한 21조1459억원이었다. 1인당 입원일수는 2.5일, 외래일수는 16.8일이다.

연령대별 요양급여비용은 10대의 경우 1조9613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했으며 30대는 남성이 1조9386억원, 여성 2조5592억으로 성별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5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진료비가 모두 감소했지만 70세 이상은 13조859억으로 전년대비 11.99%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17조5283억원(34.5%)이었으며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30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1인당 요양급여비용의 3배에 달하며 노인 1인당 의료기관방문일수는 68일이었다.

지난해 암 환자와 진료비도 증가했다. 암상병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37만9724명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고 진료비는 5.2% 늘어나 2조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암진료 다빈도순위는 갑상샘암(5만3737명), 위암(4만5745명)이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암은 유방암(9.3%), 전립선암(7.6%)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암(3132억)과 기관지 및 폐암(3073억), 위암(2740억) 순으로 진료비가 많이 지출됐다.¹⁴⁾



2. 日 도시바 ‘의료사업’ 본격 진출 선언(2/26)

일본 도시바는 기존 에너지 및 저장장치에 이어 세 번째 주력 사업으로 의료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의료사업 전략의 핵심은 예방, 진단 및 치료, 예후 및 간호서비스, 건강증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시바는 이를 통해 내년도에 6,000억엔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회사는 이미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의료영상 장비를 통해 진단 및 치료 사업은 시도한 바 있다. 도시바는 "전세계적으로 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기술들을 결합, 통합하여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바는 지난 2009년 국내 의료정보 전문업체인 인피니트헬스케어와 공동 출자해 '티아이메디칼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CT와 엑스레이 등 도시바가 생산한 의료장비를 국내에 독점 판매하고, AS업무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지난해 티아이메디칼시스템즈의 지분을 도시바 측에 전량 매각했다.¹⁵⁾

3. 일부 의학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중지해야"(2/26)

일부 의학자들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학자들은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전하며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자들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신에 들어가 있는 특수 알루미늄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리대학의 프랑수아 오셰 교수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주사하면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알루미늄 일부가 뇌에 축적돼 신경과 치매 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의학자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DNA가 알루미늄에 흡착돼 인체에 심한 자기면역질환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후생성 전문가팀은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이 주사 통증으로 불안을 느끼는 환자의 심신 반응 때문에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자궁경부암 백신의 위험성을 경고한 일부 의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자궁경부암 백신이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학회·부인종양학회 또한 지난해 6월 성명서를 통해 일본 부작용 사례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중단할 근거는 없다고 표명하기도 했다.¹⁶⁾

4. 의사·치과·한의협 등 해킹 '1700만명 정보' 털려(2/26)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의사와 일반회원 15만 6,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5~16일 이들 3개 협회 홈페이지를 '웹셸(Web Shell)' 방식의 해킹 수법으로 해킹했다. 웹셸은 악성코드를 사이트에 심어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의 해킹 수법이다.

이들이 해킹으로 탈취한 개인정보 규모는 의사협회 8만명, 치과의사협회 5만6,000명, 한의사 2만명이다. 이 중에는 의사가 아닌 일반회원도 일부 있지만 회원 대부분의 직업은 의사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이다. 의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의사면허번호도 털렸고 한의사협회는 근무지·졸업학교 등의 정보도 유출됐다.¹⁷⁾

5. 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유죄 확정(2/27)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서울대 파면도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박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소의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소비하는 등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임 여성들에게 수술비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은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는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중 7억

8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혐의와 난자 제공자에게 불임시술비를 깎아준 혐의 등도 받았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날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을 황 박사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특성, 황 전 교수가 논문의 데이터 중 일부를 고의로 조작해 허위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황 전 교수를 파면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 전 교수에게는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다"면서도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한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 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황 전 교수에 대한 징계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¹⁸⁾

- 1) '박 대통령 "보건의료 등 규제 혁파...원격의료 활성화"', 2014.2.25., <라포르시안>
- 2) '외국병원 설립 기준 완화...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가이드 라인 제정', 2014.2.25., <연합뉴스>
- 3) '총과업 전 회원 투표율 53.82% 넘어', 2014.2.26., <의협신문>
- 4) '3월부터 의료관광객 전용 '메디텔' 설립 허용', 2014.2.27., <라포르시안>
- 5) '與 '국민건강특위'라더니...자문위원 보니 의료영리화특위?', 2014.2.24., <라포르시안>
- 6) '대형병원 무분별한 병상수 늘리기 사라진다...사전협의제 도입', 2014.2.27., <조선비즈>
- 7) '원격진료법 국회 제출, 내달 10일 이후 예상', 2014.2.26., <메디파나뉴스>
- 8) '복지부도 원격의료 입법 반대..국회 문건서 확인', 2014.2.26., <노컷뉴스>
- 9)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 강원도에서 현실화되나?', 2014.2.21., <프레시안>
- 10) '헬스케어 기능 갤럭시S5 '의료기기' 암초', 2014.2.26., <경향신문>
- 11) '직영 전환 군산의료원...경영활성화 '의문'', 2014.2.27., <데일리메디>
- 12) '서부산권 대형병원 '의료관광 벨트' 구축 추진', 2014.2.27., <연합뉴스>
- 13) '藥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2015년 도입', 2014.2.27., <데일리메디>
- 14) '지난해 건강보험진료비 51조...전년대비 5.2%↑', 2014.2.25., <경향신문>
- 15) '日 도시바 '의료사업' 본격 진출 선언', 2014.2.26., <라포르시안>
- 16) '일부 의학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중지해야"...부작용 때문?', 2014.2.26., <세계일보>
- 17) '의사·치과·한의협 등 해킹 '1700만명 정보' 털려', 2014.2.26., <데일리메디>
- 18) '대법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 유죄 확정...서울대 파면도 정당"', 2014.2.27., <아주경제>